

이대로면 역사 왜곡 불보듯...부실조사 내용 바로잡아야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44년만의 진상규명, 불씨 살려야

<하> 남은 과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실리고 있다.

5·18 전문가, 관련자 등은 우선 진상조사위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왜곡과 부실 조사된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 내용을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종합보고서가 의결되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 결과로서 법적 권위를 갖게 된다.

문제는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개

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일병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시민군인지 계엄군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등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렸으며, 나주 무기고 피습 사건은 무기 피탈 시점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내리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서둘러 공개할 것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종합보고서 초안을 확인해야 왜곡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보고서 초안을 조속히 공개해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진상조사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5·18 조사·연구 기관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적 조사 활동이 지난해 종료된 진상조사위가 군의 발포경위와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양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서둘러 공개할 것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종합보고서 초안을 확인해야 왜곡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보고서 초안을 조속히 공개해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 이후로도 진상조사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5·18 조사·연구 기관 및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적 조사 활동이 지난해 종료된 진상조사위가 군의 발포경위와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양

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달 기준 11개로 늘어졌던 5·18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광주시장의 책무로 5·18 진상조사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기도 했다.

5·18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추후 진상조사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는 민간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 공식 조사를 보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조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민간 주도 조사 체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일부가 국민의힘 추천 위원 등 보수 성향의 위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결론이 뒤바뀌는 등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5·18기념재단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 조사를 거치기 위한 민간 조

사 보고서를 제작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제작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자료들을 광주시 5·18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현행법상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이후 3개월 내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로도 사본을 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상조사위 보고서 발간까지 마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위 기록물이 반드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로 이관돼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 기관도 조사 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도박에 빠진 청소년 늘어간다

광주전남도박예방치유센터 올해 45명 접수... 지난해 동기비 1.8배 ↑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18)군은 지난해 8월 친구들의 권유로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카드 도박)를 시작했다. A군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도박에 푹 빠지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지난해 12월 A군을 도박 치료 센터로 이끌었다.

하지만 A군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학 때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가 개학 후 학교만 가면 도박에 손을 대는 등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휴대전화로 바카라에 빠져든 B(15)군은 1년 여 동안 도박 중독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허덕였다. B군 역시 시작한 학교 선·후배 때문이었다. 소액인데다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의 탓에 걸린 B군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까지 감행했다.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8일 밝혔다.

도박문제에 지난 1월부터 4월 29일까지 센터를

찾은 청소년은 총 45명으로 올해 신규 접수 도박자 중 2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센터에 접수한 청소년 수(25명)보다 1.8배 많다.

45명 중 고등학생이 27명(60%)이고 중학생은 18명(40%)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도박에 빠져든 학생도 있었다.

도박 종류로는 바카라가 71.1%(32명)로 가장 높았고 불법 스포츠 토토(8명) 17.8%, 기타(블랙잭, 용호)순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도박 경험 평균 기간은 1년 7개월이고 도박자금 평균은 중학생 204만원, 고등학생 62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단순 돈내기 게임이 아닌 온라인 불법 도박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록 액수가 커지는 점, 청소년의 도박경험이 단순 호기심에서 멈추지 않고 1년 이상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점, 도박이 청소년들이 문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 배우는 초등생들 5·18 44주년을 앞두고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효천초 6학년 학생들이 5·18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앞에서 문화해설사로부터 1980년 5·18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오류에 시민들 큰 불편

광주 접속 지연 민원 잇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됐다. 지난 2월 13일 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광주 각 지자체별로 지연 시간대가 달랐지만 수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돼 지방세 납부를 하지 못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광주시 북구 세무공무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접속이 지연돼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전화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는 오후 시간대 3시간여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수분이면 납부가 완료돼야 하지만 3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가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납세 창구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난 2월 이번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납부가 물리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등 본격적인 납세 기간을 앞둔 상황에서 세금 납부가 물리면 또 민원이 몰릴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동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대산업개발 간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학동 봉과참사와 관련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미리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간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8일 광주지법 402호에서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간부 A씨와 철거하도급업체인 H기업 대표 B씨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

판부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A씨가 H기업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받거나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후보를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